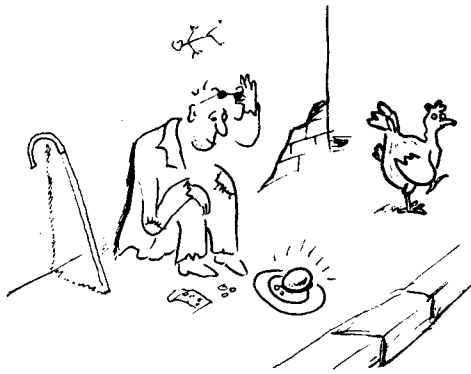


**양계장 흑자경영,  
관리비를 줄이자**



금융실명제가 시작되어 검은 돈이 사라지고 있다. 세금도 안내고 흘러다니던 큰 돈들이 자취를 감추거나 거래자료를 요구하는 등 양계장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양계산물의 부가가치는 낮은 편이지만 거래

금액으로 보면 외형이 엄청나다. 몇 개월 째 양계장에도 경기가 풀리지 않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모두가 적자라고 한탄을 하는 소리 뿐이다.

이런때 일수록 양계장의 흑자경영을 이끌어 내는 묘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변정세는 날로 험악해지고 있어 마음이 흩어지면 적자경영에 허덕이게 됨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제 사료원료가격이 심상찮은 움직임이다. 옥수수 가 그런가 하면, 수입밀(식용)에서까지 농약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되어 사료용으로 쓸려다 철회되는가 하면, 국제 대두가격이 상승하자 수입대두박이 꺾충 값이 뛰더니 이번에는 국내산 대두박가격을 대두3사에서 한꺼번에 14%나 인상시켜 놓았다.

이같은 사항들은 사료의 품질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추이대로

라면 생산이 과잉되어 불황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양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양계장에 뛰어들어 경상비 중에서 일반관리비를 어떻게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건비, 원자재절감, 관리비 등 그 요인이 많을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기가 위축될수록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수입이 감소하는 농장 경영을 한다는 것은 과거 언젠가는 호경기가 오겠지 하는 투기에 가까운 경영 방식에서나 통했던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는 호황이 자주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도 빨라졌고,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원가를 얼마나 더 낮추느냐에 따라 흑자나, 적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계수입추천, 수급안정과 조절역할이 목적이다.**

·우편물(가)압인기

**·중계 수입추천' 축협으로**

**돈·양계업계 강력 반발**

**전문성 결여... 신농정에 역행**

이해 대해 정진국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계장은 "중계수입추천위원회를 편이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계가 우려하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가인 닭은 삼겹살 육십부위는 계속 예상되고 있어 미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 자가 직접 정육할 줄은 큰 것으로 피해가 클 리위원

가 관장하고 있 8수입추천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양계업계의 민낯'을

했다. 중계는 왜지나 소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을 한 이나만 생산자단체도 없는데 '양이 타축종'이 축협으로 이관시킨다 '양이 축협으로 이관시킨다'는 축협의 발상

정부가 지난 '85년 8월 7일부터 관장해 온 중계의 수입추천권을 축산법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을 정비·보완한다는 방침으로 8월 17

일자로 중계의 수입추천권을 축협중앙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축산법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본회는 즉각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과거에는 중계업자면 누구나 은행에 가서 수입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중계를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한 조절역할이 없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축산법을 개정 중계 천수 이상, 산란계 3만수 이상, 육계 1만수 이상의 사육업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산업안정을 도모케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중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을 하여 왔다. 양은 업계가 필요한 만큼을 추정하여 쿠티방식으로 하였는데 매년 본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용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해진 테두리에서 일시에 수입이 몰린다거나, 배정한 양을 초과해야할 필요가 있다거나, 불황이 길어져 생산조절상 수입을 제한코자 할때 이견조정에 당혹스러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의 수입추천권을 종축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수급조절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인 본회를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권한을 민간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처럼 이관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을 업종별 고유의 전문성을 채고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본회는 '83년 이전에 중계수입허가 업무(관세면세물품확인 등)를 장기간 취급하였고, 정부의 위탁을 받아 닭의 일반검정 및 능력검정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85년 이후에 수입된

종계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계수입 추천권은 마땅히 현재의 대한양계협회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 시설자동화, 기준이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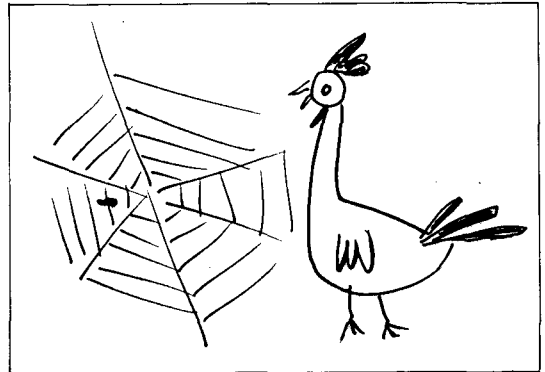
양계산업을 보고 이제는 장치산업이라고까지 부른다. 어지간한 농장에 가보면 제조업체의 공장설비를 방불케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양계농장이 제아무리 시설자동화를 하였다해도 생산량을 시시각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놓고 볼 때 농업입에는 틀림 없다.

어떤 형태로건 시설을 자동화 하더라도 양계농가는 우선 투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한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자동화시설을 하면서 곳곳에서 기계공급자와 설치농가간에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서로의 득을 위해 옥신각신 하는 것은 거래상 있을 수 있는 일일겠지만 대부분이 계약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불신이 초래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자동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먼저 케이지의 용량에 따라 계사를 지어 환기를 최대한 조절하든지, 아니면 계사의 용량에 맞게 케이지의 크기를 결정하든지 해야 수당가격이 비교대상이 되겠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케이지에 최대한 수용가능한 수치로 가격비교를 하게되면 물의가 따른다.

또한 자동화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무엇이 기본계약에 해당하고 무엇이 옵션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불하여 공사만 끝나면 완전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급이, 집란, 계분시설에 있어 부대시설이 추가되어야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 것을 추후에 알았을 때 부랴부랴 자금을 만들어내다 보면 농장경영에 차질이 발생하며 고통을 받는 수가 많다.

대금지불을 놓고도 불만이 많다. 수입품의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면 국제관행상 정부가 고시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선적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는 신용사회에 익숙치 못하여 물건이 도착하여야 안심하고 대금을 지불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공사대금이 역대를 넘어서면 몇개월간의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 이런점이 늘 싸움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도 수출·입에 대한 무역의 기본상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결론적으로 자동화란 철저한 경영분석을 바탕으로 농장의 실정에 따라 다르며 투자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값으로만 대충 비교하여 애매모호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자동화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득보다 손해가 커지는 수가 많다. 이 점을 공급자나 설치농가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양계**